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축하메시지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 01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남경필입니다.

최신 복지뉴스와 타 지역의 복지시책 등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100호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간복지동향은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변화 및 복지 이슈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복지 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제시를 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발간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소식과 통계자료를 담은 경기도 주간복지동향은 경기도 복지정책 발굴 및 개발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도민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간복지동향이 경기도 복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경기도를 '도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경기도'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간복지동향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경기도지사 남 경 필

**02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문경희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주간복지동향>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100호가 나오기까지 고생한 복지재단의 노고에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관심가지고 매주 정독해 주신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주간복지동향에서 만난 많은 주제들이 신선하고 유용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해 말 경기복지재단이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31개 시군의 복지데이터를 분석하고 연속보도한 일이었습니다. 시군별로 비교가능한 객관적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공유하여 경기도 균형발전에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보건복지상임위원회도 시군 간 격차를 해소를 의정활동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100호 발간을 축하하며, 최근 복지이슈와 중앙 및 시군의 복지 동향을 알려주는 유용한 소식지로 거듭나길 응원합니다.

**03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우선,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1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주간복지동향>은 경기도와 인연을 맺은 저에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복지 현안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중앙정부의 법제도적 변화를 신속하고 압축적으로 정리, 전달하고, 이러한 변화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중앙정부 정책 동향’ 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복지시책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소개하는 ‘ 시도/시군구 동향 ’ 도 유익한 영감을 주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통계로 보는 복지’ 였습니다. 신문 칼럼을 쓸 때 글의 논거로 최신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통계로 보는 복지는 관련분야 데이터를 시계열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시각화하여 필요한 통계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편집진의 주관이 투영된 심도있는 분석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미 세간에 알려진 정보들 중 과장 또는 축소된 내용을 다시 되짚어보고 올바른 관점과 판단을 도와주는 ‘팩트 체크’ 가 있으나, 편집진의 의견을 담은 현안 분석이 추가되길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이며, 이는 국가재정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민간과 함께 노력해야만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간복지동향에는 민간복지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실리기를 기대하며, 도정 운영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04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깔끔하게 짜여진 소식지를 받아 보는 작은 즐거움을 누려온 지 벌써 2년, 어느덧 100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기를 단위로 느릿한 강물처럼 시간이 흘러가는 교수의 눈에 매주 창문을 두드리는 소식지 모습이 한편으로는 경이롭고, 때로는 이면에 담겨있는 많은 분들의 분주함과 땀냄새가 느껴져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면 내외의 짧은 분량이지만 중앙정부의 시의성 높은 정책은 물론 경기도정과 산하 시군 복지동향의 핵심을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는 소식지는 날로 그 위상이 높아져 왔습니다. 알찬 내용과 품위 있는 편집이 독자를 압도하는 <주간복지동향>은 경기복지재단, 더 나아가 경기도 복지계의 큰 자랑꺼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렇게 소중한 소식지의 가치를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요로의 관계자가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워낙 정보의 홍수시대라 그 분들을 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매사가 그러하듯이 첫발을 디디게만 하면 그 다음은 소식지의 매력에 빠져 스스로 열독하는 독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년 뒤 200호가 발간될 때 지금보다 두 배로 증가한 열독자를 거느린, 경기도 복지정책을 선도하는 더 멋진 소식지로 일취월장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05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주간복지동향>의 1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매주 보내주신 복지정보와 관련 이슈들을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간복지동향>을 열심히 읽어왔던 독자의 한사람으로써, 그간의 주간복지동향에 대한 감사의 말과 함께 몇 가지 소감을 전합니다.

<주간복지동향>은 마치 언론사의 뉴스처럼 시사점 있는 복지현안들을 빠른 주기로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다루는 주제 또한 노인·아동·장애인·빈곤 등 전통적 복지영역을 넘어 주거, 1인 가구, 재정분석, 복지기술 등 매우 다채로워지면서 점차 그 매력을 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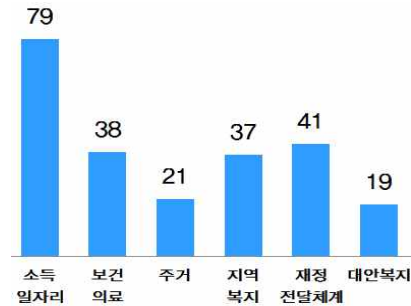
특히나 경기도로 특정된 독자층을 고려하여 현안들마다 경기도 맞춤형 시사점, 이를테면 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 현행 조례 및 정책 변경사항을 미리 분석하여 제시한 부분이 <주간복지동향>만의 장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정책변화가 복지 현장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도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이나 복지인력수급 등 우리 현장의 이슈들도 보다 많이 조명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매력적인 <주간복지동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복지현장에서 기대와 관심 지속하겠습니다.

# 02 그동안 주간복지동향은

## 주간복지동향 현안 건수 창간호부터 99호까지 총 534개 현안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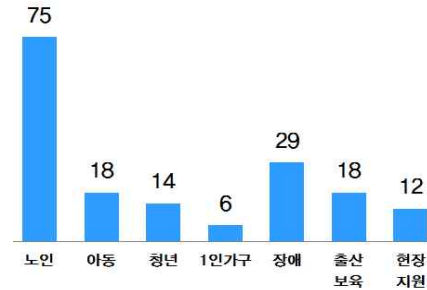


### 분야별

전체 534건 중 소득일자리가 79건(14.8%)으로 최다 복지재정과 공공전달체계 분야는 41건, 보건·의료 분야 38건, 지역복지 분야 37건 순 복지기술 등 대안복지(19건)와 주거 관련 현안(21건)도 최근 자주 등장하였고, 여가·기부·자원봉사 에너지복지 등 기타영역도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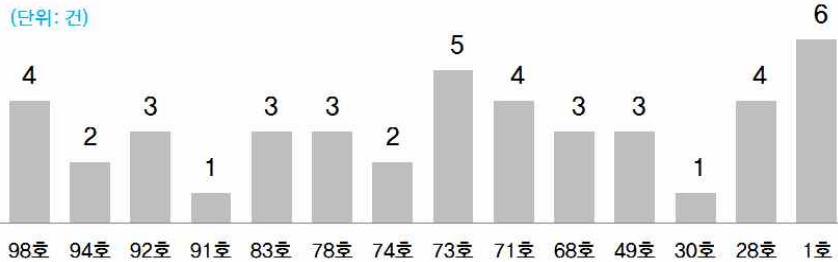
### 대상별

대상별로는 노인관련 기사가 75건으로 압도적 노인 외에 장애인 29건, 아동 18건, 청년 14건 순이며, 종사자 처우개선 등 현장지원 12건, 인가구 관련 현안도 6건이 발굴 기타 외국인·이민자·노숙인·북한이탈주민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해 보도



## 언론반영 실적 복지이슈를 만들어 복지 발전을 견인하는 주간복지동향

발 빠른 정보와 영역별 전문가의 현황 분석으로 그간 총 44건의 주간복지동향 현안이 언론에 반영



### 지역 간 격차

특정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타 시도, 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간 격차 현황을 제시한 경우 언론반영도가 높게 나타남

- 94호 도내 시군별 노인진료비 실태
- 68호 경기도민 소득, 시군 간 314만원 격차
- 30호 시군의 출산장려제도 예산, 감소 추세

### 경기도 핫 이슈

경기지역에서 특히 관심가지고 있는 복지이슈를 집중보도한 경우,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전파하고 있음

- 71호 경기도 주거비 부담, 전국 최고 수준
- 49호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애인복지 공약
- 28호 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 직접 생산한 데이터

경기도민 복지 실태조사 결과, 최신 연구보고서 등 재단이 직접 생산한 희소성 있는 자료일수록 언론반영도가 높았음

- 92호 경기도 기초생활급여 탈락가구 현황
- 78호 경기도민 1인당 진료비, 연천 최고
- 74호 경기도 장애인가구 절반이 빈곤상태

### 새로운 현안의 발견

아직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지역의 새로운 현안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그 현황을 제시한 경우 반영률이 높게 나타남

- 98호 2020년 미래질병 1위, 우울증
- 83호 지역별 기부참여 현황 비교
- 73호 통계로 보는 초저출산 위험 신호

03

# 앞으로 주간복지동향은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양복완입니다.

2015년 5월 13일에 주간복지동향 첫 호를 발간하고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주간복지동향은 경기도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복지현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 관계를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매주 최선의 주제를 선정하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도와 도의회, 학계, 현장, 시군 등의 독자로부터 들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는 칭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칭찬을 동력으로, 100호를 발간하는 이 시점에서 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간복지동향은 다시 한 번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 다음호부터 시의성에 분석력을 보완한 <기획기사> 코너가 신설됩니다.

- 첫 페이지를 <기획기사>로 전환하고, 특정 주제에 대해 3~4주 동안 연재하여 그간 지면의 한계로 인해 스쳐간 논점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 외부전문가를 필진으로 섭외해 논의의 깊이와 관점의 다양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 새로 시작하는 <기획기사>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을 기대하며, 본 코너에 알맞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재단 발간담당자에게 제안 부탁드립니다.
- 또한 <중앙정부 정책동향>에 배치된 경기도 시사점 비중을 확대하여 현안에 대한 경기도 맞춤형 해법을 더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 주간복지동향을 더 쉽게 검색하고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메일링서비스 외에도 인터넷에서 주간복지동향을 볼 수 있도록 검색환경을 최적화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재단에서 구축 중인 복지 플랫폼에 <통계로 보는 복지>, <시도/시군 정책동향> 속 데이터를 탑재하여 복지데이터 공유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복지현장 등 주간복지동향에 관심 가져주시는 새로운 독자층을 위해 접근이 용이한 새로운 배부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 짧지만 도정에의 영향력이 큰 <주간복지동향>, 경기도 복지혁신을 견인하는 <주간복지동향>이 되도록 매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발간되었던 <주간복지동향> 자료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ggwf.gg.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내드리는 주제 리스트를 참조해주세요.

# 주간복지동향 주제 리스트

중앙정부 정책동향			호수	일자	내 용
1호	5.13.	행정자치부 중심의 책임읍면동제	25호	10.28.	정부발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vs 유지	26호	11.4.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2호	5.20.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27호	11.11.	서민중심 금융복지를 실현하는 서민금융복지법 발의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 수립	28호	11.18.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복지발전소로 새로운 도약
3호	5.27.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29호	11.25.	노인자살예방정책, 사회통합모델로의 전환이 필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30호	12.02.	노인일자리사업인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인가?
4호	6.3.	65세, 더 이상 노인이 아닌가? 일본의 사례	31호	12.09.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 지원의 근거 마련
		공무원 연금개혁	32호	12.16.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사업 본격 추진
5호	6.10.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발병과 대응	33호	12.23.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 시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	34호	12.30.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 없는 복지사업에 제동
6호	6.17.	주거기본법 국회본회의통과	35호	1.6.	주거급여 조사, 지역 자체조사 VS 전국 통일된 조사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6호	1.13.	2016년 복지 예산 123,4조원, 전체 예산의 31.9% 차지
7호	6.24.	사회보장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대응	37호	1.20.	2016년 경기도형 NEXT 주민센터 설치
		내년 예산 요구 390조9000억 보건복지 중심 4.1% 증액	38호	1.27.	경기복지재단의 청렴경영
8호	7.1.	그리스 디폴트 확정	39호	2.3.	윤리경영의 국제 기준/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적금융 네트워크 출범과 경기도의 대응	40호	2.17.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법률 제 개정
9호	7.8.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쟁점	41호	2.24.	경기도 전국 최초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청렴도조사 실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쟁점과 대응	42호	3.2.	보건복지부 지역 사회보장지표 개발
10호	7.15.	보건과 복지 분리, 정부조직 개편안 발의	43호	3.9.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복지관 평가지표 개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복지공무원 인력 확충	44호	3.16.	'사회성과보상기금법(안)' 마련으로 SIB 활성화 기대
11호	7.22.	일본, 도로교통법 개정, 75세 이상 치매체크 강화	45호	3.23.	20년 후 1인 가구 중 45%가 독거노인
		수유동 80대 자매 사건, 복지사각지대는 여전	46호	3.30.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으로 변경
12호	7.29.	클라우드펀딩법 개정안	47호	4.6.	노인 장애인 등 복지수요 많은 지자체에 교부세 증액지원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완화치료 건강보험 적용	48호	4.14.	신년사로 본 2016년 정부의 복지관련 정책 방향
13호	8.5.	새로운 복지서비스 제공의 대안, 공유경제	49호	4.20.	「청년발전기본법안」 발의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신탁 출범	50호	4.27.	201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역할 확대
14호	8.12.	국가 및 지방의 재정분담 개선	51호	5.4.	고독사, 독거노인 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무료로 대학 강좌 수강 시대 개막 : MOOC	52호	5.11.	아동학대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 '착한신고제' 도입
15호	8.19.	마이크로칼리지, 노인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 기회	53호	5.18.	보건복지부, '복지 행복 체감 프로젝트' 추진 계획 보고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복지의 명암	54호	5.25.	보건복지부, 읍면동 복지허브 사업 본격화
16호	8.2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55호	6.1.	신뢰, 소통, 협력이 경쟁력, 「사회적 자본 증진법안」 발의
		지자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1,496개 정비 추진	56호	6.8.	복지부, 지자체 새 복지제도 전년 4월까지 협의 의무화
17호	9.2.	노인연령 기준 논의, 정부 차원에서 본격화	57호	6.15.	장애등급제, 복지 욕구 중심으로 개편
		장애인고용부담금, 국가 지자체에도 부과	58호	6.22.	중앙정부, 통합적 보호체계 중심의 노숙인 대책 수립
18호	9.9.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육성법	59호	6.29.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60호	7.6.	지역사회보장지표를 반영한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수립
19호	9.16.	포괄간호서비스 신규참여 기관에 시설 개선비 지원	61호	7.13.	작년 우리나라 함께 출산율 1.24명, 사망자는 역대 최다
		노동개혁 3대 입법과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영향	62호	7.20.	정부의 57개 청년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로 일원화
20호	9.23.	2016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분야에 122조9000억원 배정	63호	7.27.	사회적경제 조차의 민간 자금 조달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 발의
		치매극복을 위한 맞춤형 가족 정책 추진 필요	64호	8.3.	인공지능(AI)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21호	9.30.	국토교통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발표	65호	8.1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한다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막는다	66호	8.17.	통계청, 「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시
22호	10.7.	지자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역화폐 실험	67호	8.24.	사회복지사의 날,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노인의날,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로부터	68호	8.31.	주거복지, 4.13 총선의 핵심공약으로 부상
23호	10.14.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69호	9.7.	보건의 날을 맞아 살펴보는 20대 총선의 보건의료 공약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을 완화	70호	9.14.	노인 장기요양기관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24호	10.21.	지역사회보호를 위해 노인주거정책의 전환 시급	71호	9.21.	여소야대 정국,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에 변화 기대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72호	9.28.	장애인의 날(4. 20.), 장애인복지 정책 변화와 전망
25호	10.28.	한국 노인복지 수준 96개국 중 60위	73호	10.5.	지방재정개혁 추진 방안 발표(4. 22.)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74호	10.12.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 필요
26호	10.28.	국내 클라우드펀딩 활성화 시동	75호	10.19.	경기도 주간복지동향 발간 1주년을 축하합니다.
		유엔, 한국 인권상황 국가보고서 심의 우려 표명	76호	10.26.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정책(가칭 청년내일공제) 추진

# 주간복지동향 주제 리스트

호수	일자	내 용	호수	일자	내 용
53호	5.18.	100세 시대, 노인복지 이대로 괜찮은가?	83호	12.22.	사랑의 온도탑 39.1도, 기부에 한파가 분다
54호	5.25.	건강보험 관련 정책 변화 전망			2016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 발표
55호	6.1.	보훈의식 1%가 증가하면 사회갈등요소 1.59% 감소 조선업의 구조조정, 구멍 뚫린 실업 안전망	84호	12.29.	2016년 대한민국 복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17년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56호	6.8.	기본소득 논의, 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이 될 수 있나?	85호	1.5.	2017 신년사에 담긴 국내외 정책동향
57호	6.15.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부문 투자 늘린다	86호	1.12.	노인연령 기준 상향조정 5년 만에 재논의 중앙정부 2017년 주요 정책추진 방향 발표
58호	6.22.	경로당,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제로 관심 증가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원, 대상자 80%까지 확대	87호	1.19.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경기도 시사점
59호	6.29.	경기도 민선 6기 복지분야 전반기 분석과 하반기 방향			행정자치부 2017년 업무계획
60호	7.6.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 공동공간에 CCTV설치 등 공공실버주택"따복실버하우스"로 확대	88호	1.26.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 발의
61호	7.13.	제 5차 인구의 날, 인구절벽 위기의 대응책 마련 기초수급자 '17년 생계급여, '16년 대비 5.2% 인상	89호	2.2.	요양병원 인종제도, 실효성은? 출산율 최저시대, 대선주자들의 육아정책
62호	7.20.	기초연금 시행 2년, 성과와 전망	90호	2.9.	복지부, 2월부터 토요일 근무 금지 시행 소득상위 10%, 소득집중도 48.5% 역대 최고치 갱신
63호	7.27.	OECD 사회통합지표가 보여주는 각박한 한국사회 2017년 최저임금시급 전년대비 7.3% 인상된 6,470원	91호	2.16.	복지허브화 전국 1,152개 읍면동 추가 실시
64호	8.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양육시설 퇴소아동,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	92호	2.23.	보건·복지관련 법률 제·개정
65호	8.10.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관한 규정, 개정안 발의 뜨거워지는 한반도, 폭염 대책 마련 중	93호	3.2.	대선주자들 복지공약, 절반의 지지 3월 8일은 107번째 맞는 '세계 여성의 날' 2016년 출생아 수, 역대 최저치 재난적 의료비 가구 지원,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
66호	8.17.	연명 치료 vs. 호스피스, 어떻게 임종을 맞을 것인가? 우울증 깊어가는 농어촌	94호	3.9.	아동학대·실종 방지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
67호	8.24.	빈부격차 악화, 저소득층 소득 감소 커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이 필요	95호	3.16.	국민연금 급여액, 4월부터 1%(3,520원) 인상 노동계, 「노동시간임금줄여청년고용늘리자」 제안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주거비 부담 1.5배 가중
68호	8.31.	내년 정부 예산 400조7천억 원, 복지예산은 130조 원 경기도민 소득, 월 338만원, 시군 간 314만원의 격차 발생	96호	3.23.	사교육비 총 규모 약 18조 6백억 원, 역대 최고치 기록 우리나라 근로시간, 연 2113시간으로 OECD 최고 수준 공황장애, 70대 이상 노인 3.4배 증가
69호	9.7.	9월 7일은 제 17회 "사회복지의 날" 경기도 취약계층 고용률 전국 보다 낮고, 시군간 격차 커	97호	3.30.	개인신용정보 이용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법" 통과 혼인 건수, 42년 만에 역대 최저..황혼 이혼은 꾸준히 증가
70호	9.22.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경기도 인구 7.1% 증가	98호	4.6.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2017 세계보건의 날, "우울증, 함께 이야기합시다"
71호	9.29.	아동수당,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경기도 주거비 부담, 전국 최고 수준	99호	4.1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9년의 성과 장애인 주치의제도 올해 12월부터 시행
72호	10.6.	노인의 날, 노인은 행복한가? 경기도 노인돌봄 서비스 비용, 월소득의 19.37% 부담	<b>시·도/시 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b>		
73호	10.13.	임산부의 날, 배려 받고 있나요? 가임기 여성, 만성질환 진단에도 19.2%가 미치료	1호	5.13.	늘어나는 '고독사'와 지자체별대책마련
74호	10.20.	OECD 지표로 보는 한국의 빈곤 경기도 장애인가구, 절반이 빈곤 상태	2호	5.20.	지역특색반영 복지사업
75호	10.27.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복지자치는? 4차 산업혁명과 복지	3호	5.27.	전국 지자체의 복지기준선 대한노인회 "노인기준연령 높이는 방안 공론화"
76호	11.3.	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 배포 경기도 2017 복지예산 5조2,957억 원, 전체 예산의 31.3%	4호	6.3.	전국 지자체의 금융복지사업
77호	11.10.	광역 복지재단, 지역복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급부상 경기복지재단 창립 9주년 축하 메시지	5호	6.10.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78호	11.17.	일본 사회복지법인 개혁과 시사점 [2016 사회조사 결과] 국민 절반 '사회위험 증가'	6호	6.17.	전국 지자체의 주거복지조례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등 제정
79호	11.24.	한국 삶의 질 순위 47위, 전년보다 7계단 하락 노인가구 필요 생활비, 소득보다 낮아... 대책은?	7호	6.24.	고용과 복지를 한번에, 고용복지+센터
80호	12.1.	12월 5일은 UN이 정한 자원봉사자의 날 위기의 50대, 현황 진단 (I)	8호	7.1.	시군 출연 복지재단 설치 현황
81호	12.8.	OECD 가입 20년, 성과와 과제 400조 슈퍼예산 통과... 복지예산 비중은 32.3%	9호	7.8.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 등 추진 서울시, 사회적기업 공동구매 비율 5%까지 확대 선언
82호	12.15.	위기의 50대, 현황 진단 (II)	10호	7.15.	생활임금조례 현황 내년최저임금 6,030원
			11호	7.22.	공유경제를 활용한 복지정책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커뮤니티 모집
			12호	7.29.	에너지 복지정책

# 주간복지동향 주제 리스트

호수	일자	내 용	호수	일자	내 용
13호	8.5.	주거의 새로운 대안, 공동체 주택이 뜬다	58호	6.22.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
14호	8.12.	건강도시	59호	6.29.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과 경기도 수급자 변동 추이
15호	8.19.	고령친화도시	60호	7.6.	경기도 31개 시군별 성인지 예산 비교
		경기도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대회 추진	61호	7.13.	전국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비교
16호	8.26.	안전도시	62호	7.20.	경기도 31개 사군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재정상황 양호	63호	7.27.	도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년까지 20곳으로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 지역대회 개최	64호	8.3.	경기도, 외국인 인구 전국 최다
17호	9.2.	경기도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244개, 3,833억원규모	65호	8.10.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18호	9.9.	지역화폐가 뜬다	66호	8.17.	경기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현황
19호	9.16.	1인 가구, 잠재적 정책수요의 중심	67호	8.24.	북한이탈주민 경기도에 최다 거주
20호	9.23.	우리동네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시군 간담회
		경기도, SIB방식으로 탈수급 복지사업 추진	68호	8.31.	시군별 빈곤율 분석... 연천 최고, 과천 최저
21호	9.30.	100세 시대, 지역별 고령화율	69호	9.7.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경기복지재단, 베이비부머세대 재도약 교육 진행	70호	9.22.	도내 20개 시군 생활임금제 도입
22호	10.7.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제도 현황	71호	9.29.	경기도 시군별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23호	10.14.	청년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수당	72호	10.6.	경기도 노인의 장기요양 등급인정 현황
24호	10.21.	국민연금 수급현황	73호	10.13.	도내 시군별 가임여성 건강 실태
25호	10.28.	국가보조사업 재정 부담과 지방재정 위기	74호	10.20.	장애인 돌봄육구 총족률, 성남 최고·의왕 최저
26호	11.4.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행복주택 확대	75호	10.27.	도(道) 자체사업 예산, 전체 복지예산의 7%에 불과
27호	11.11.	2016년 시도 예산안 키워드 분석	76호	11.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관련 도 차원 컨설팅 추진
28호	11.1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준수율	77호	11.10.	비만지도 발표... 비만인구 증가 연천 '최고', 분당 '최저'
29호	11.25.	보건복지부, 읍면동 인적안전망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78호	11.17.	경기도민 1인당 진료비, 연천 최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통과	79호	11.24.	암발생률, 시군별 최대 15배 격차
30호	12.02.	시·군의 출산장려제도 예산, 감소추세	80호	12.1.	자원봉사자 활동의 시·군별 편차 최대 23.3배 차이
		경기도, 지역복지사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상위 입상	81호	12.8.	전국 지자체별 인권조례 제정 현황
31호	12.09.	2015년 경기도민 행복지수 54.75점	82호	12.15.	경기도 50대 가구의 주거실태
32호	12.26.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83호	12.22.	지역별 기부참여 현황 비교
33호	12.23.	2015가계금융 복지조사결과발표	84호	12.29.	전국 시도별 지역소득 현황
34호	12.30.	2016년도복지제도,이렇게달라진다	85호	1.5.	신년사로 보는 지방정부 정책 이슈
35호	1.6.	신년사로 보는 지방정부 정책이슈	86호	1.12.	2017년에 달라지는 경기도 복지정책 안내
36호	1.13.	사회복지관운영비시·군별편차			경기복지재단, 복지시설 노무상담서비스 개시
37호	1.20.	도내 노인복지관 개소당 평균 운영비 9억2천5백 수준	87호	1.19.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 현황
38호	1.27.	지방정부, 아동학대 문제 주도적 책임성 가져야	88호	1.26.	6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인구 첫 추월
39호	2.3.	지방정부 주택정책, 주거복지 차원으로 확대개편 중	89호	2.2.	지역별 응급의료취약지 지정 현황
40호	2.17.	줄지 않는 노숙인, 지방정부 정책좌표 재설정 필요	90호	2.9.	경기도 시군별 소득분배 현황
41호	2.24.	경기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현황	91호	2.16.	경기도의 인구이동 현황
42호	3.2.	경기도 기대수명과 출산장려 정책	92호	2.23.	경기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탈락가구 현황
43호	3.9.	요양병원, 관리체계 및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필요	93호	3.2.	전국 9개 道 고용률 및 실업률 비교
44호	3.16.	복지, 빅데이터와의 융합으로 스마트해진다	94호	3.9.	도내 시군별 노인 진료비 실태
45호	3.23.	경기도 장애인복지 허브, 누림센터 개관	95호	3.16.	지역별 상하수도 공급률 현황
46호	3.30.	경기도민 주거비 부담, 완화장치 필요	96호	3.23.	전국 시도별 결핵 발생 현황
47호	4.6.	보건정책, 주민밀착형 서비스로 전환 중	97호	3.30.	지역별 만성질환치료 우수기관 현황
48호	4.14.	경기도 개표결과와 향후 복지 전망	98호	4.6.	2020년 미래질병 1위, "우울증"
49호	4.20.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장애인복지 공약	99호	4.13.	시도별 장애인복지 평가 결과 비교
50호	4.27.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재정 현황 및 격차	<b>FACT CHECK</b>		
51호	5.4.	줄어드는 아동인구,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급	1호	5.13.	무상복지가 소득격차 더 키웠나?
52호	5.11.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지역별 신청 현황	2호	5.20.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얼마나 증가하나?
53호	5.18.	경기도 시군별 기초연금 수급 격차	3호	5.27.	일본 정부, 고수입 고령자의 연금 감액 추진?
54호	5.25.	경기도 건강보험 가입규모 및 보험료 현황	4호	6.3.	스웨덴, 고부담-고복지에도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
55호	6.1.	도내 시군별 국가유공자 수당 추가 지원 현황	5호	6.10.	농업과 사회서비스의 만남, 복지분야 6차산업 가능한가?
56호	6.8.	전국 시도별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	6호	6.17.	출산율, 에코세대에 달려있다
57호	6.15.	2015년 지역별 노인학대 신고 현황	7호	6.24.	기본소득 개념에 근거한 '청년배당' 정책, 가능한가?



# 주간복지동향 주제 리스트

호수	일자	내 용	호수	일자	내 용
8호	7.1.	장애인 콜택시 요금 지자체별 30배 차이?	60호	7.6.	한국 여성의 지위는 실제 몇 위?
9호	7.8.	개인정보 보호의 명암	61호	7.13.	한국인은 왜 기부하지 않는가?
10호	7.15.	영국, 낮은 세금 낮은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62호	7.20.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 줄어들까?
11호	7.22.	복지재정 누수는 부정수급이 원인?	63호	7.27.	인정사정(人情情)없이 한 사회가 정 많은 한국은 아로 갔나?
12호	7.29.	직장 맘을 위한 육아환경, 하반기에는 나아지나?	64호	8.3.	옆집에 이민자가 살아도 괜찮습니까?
13호	8.5.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65호	8.10.	후진국형 질병이라는 결핵, 왜 줄어들지 않나?
14호	8.12.	복지급여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통일되나?	66호	8.17.	정년은 몇 살까지인가?
15호	8.19.	노인, 부유하면 자살하지 않는가?	67호	8.24.	지니계수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보여주나?
16호	8.26.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68호	8.31.	계층 간 상향이동, 여전히 유효한가?
17호	9.2.	주거급여 10만원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69호	9.7.	노인과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전쟁 중?
18호	9.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행복한 고용과 복지의 연계인가?	70호	9.22.	내 안전은 내가 챙긴다?
19호	9.16.	의료생활협동조합, 불법의료 행위의 온상지인가?	71호	9.29.	아동수당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20호	9.23.	노인교통안전, 실버존 지정으로 해결되나	72호	10.6.	사회복지시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범위는?
21호	9.30.	불효지방지법, 노부모 보호장치인가, 가족갈등제도인가	73호	10.13.	알고 있으면 도움 되는 임신정보
22호	10.7.	치매특별등급, 치매완화에 효과 있나?	74호	10.20.	빈곤은 소득의 결핍을 의미하는가?
23호	10.14.	복지사업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도, 실효성 있나?	75호	10.27.	한국은 복지자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인가?
24호	10.21.	국민연금, 베이비부머의 노후대책 될 수 있나?	76호	11.3.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나?
25호	10.28.	추정소득, 확실한 소득인가, 유령소득인가?	77호	11.10.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은 지나친 배려?
26호	11.4.	노인 위한 법안, 표의 힘인가 필요의 힘인가?	78호	11.17.	진료비 지출 증가, 노인 때문?
27호	11.11.	생산가능인구 감소, 이민자로 해결할 수 있나?	79호	11.24.	삶의 질 위협하는 악성지표들
28호	11.18.	소득, 기대수명의 결정요인인가?	80호	12.1.	자원봉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29호	11.25.	생산가능인구, 한국은 감소하고 미국은 증가	81호	12.8.	사회복지에서의 인권,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중요하다?
30호	12.02.	기부 활성화는 경제여건에 달려있나?	82호	12.15.	여성정치 시대, 위기 맞았나?
31호	12.9.	행복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나?	83호	12.22.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32호	12.16.	2040년 1인당 사회복지비 부담은 최대 491만원?	84호	12.29.	기본소득,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의 대안인가?
33호	12.23.	1인 가구 왜 더 빈곤해졌나?	85호	1.5.	시무식은 언제 시작되었나?
34호	12.30.	한국의 노동개혁, 노동현실을 반영하고 있나?	86호	1.12.	노인연령,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35호	1.6.	주거비부담 저소득층만의 문제인가?	87호	1.19.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으로 투명성 제고될 수 있나?
36호	1.13.	기초연금 시행으로 노인 형편 나아졌나?	88호	1.26.	노인빈곤율 61.7%? vs. 46.9%?
37호	1.20.	폐지 가격 하락으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사라진다?	89호	2.2.	출산장려금, 출산을 제고에 도움되나?
38호	1.27.	일본개호보험 예방서비스로 전환?	90호	2.9.	사라진 개천의 용, 다시 나올 수 있을까?
39호	2.3.	맞춤형 개별급여는 대상자 확대 목표를 맞췄나?	91호	2.16.	지자체 복지사업 2배 증가, 생색내기 VS 복지체감도 향상
40호	2.17.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만으로 안전할 수 있나?	92호	2.23.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초점은 '관리' vs. '인권'
41호	2.24.	장애인보호작업장, 임금보다 직업재활이 더 중요	93호	3.2.	고용률 높은 지역, 고용의 질도 높을까?
42호	3.2.	경기도의 낮은 고령화율은 출산율이 높기 때문?	94호	3.9.	저소득층 신용정보조회, 생활보장 때문?
43호	3.9.	요양병원, 병원인가? 요양시설인가?	95호	3.16.	장사정보시스템, 합리적 선택정보 제공하나?
44호	3.16.	인간을 닮은 기술(AI), 불평등을 심화시키나?	96호	3.23.	청년실업률 12.3%, '그냥 신 청년은?'
45호	3.23.	한국의 빈곤 노인, 자산만 있고 소득은 없다	97호	3.30.	빈곤의 덫, 빠져나오면 좋지만...
46호	3.30.	주거급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되나?	98호	4.6.	상용직 vs 임시일용직 임금격차 당연한가?
47호	4.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이 돈 번다	99호	4.13.	장애인의 날, 차별인가? 배려인가?
48호	4.14.	국회의원, 지역의 일꾼 VS 나라의 일꾼?	<b>통계로 보는 복지</b>		
49호	4.20.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배려가 아닌 권리	1호	5.13.	외로운죽음, 무연고사망자
50호	4.27.	지방재정개혁, 격차 완화 VS. 지방자치 훼손	2호	5.20.	부양의식의 변화
51호	5.4.	아동학대, 누구를 위한 신고인가?	3호	5.27.	급증하는 1인가구와 가난한 노인
52호	5.11.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해결책은?	4호	6.3.	대한민국,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53호	5.18.	노인은 노인친화상품을 좋아하는가?	5호	6.10.	아동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
54호	5.25.	물지마 살인이 왜 여성 혐오 논쟁을 가져왔는가?	6호	6.17.	OECD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55호	6.1.	실업급여를 길게 많이 받으면 구직과 근로의욕이 떨어지나?	7호	6.24.	소득과 행복과의 관계
56호	6.8.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적절한 청년 정책인가?	8호	7.1.	한국인의 여가생활
57호	6.15.	노인에 대한 차별, 노인인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	9호	7.8.	사회복지사가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 속 경기도
58호	6.22.	경로당, 노인들이 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가?	10호	7.15.	트레킹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
59호	6.29.	승파 세모키는 '세모'법으로 빈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11호	7.22.	문화공연 얼마나 보시나요?

# 주간복지동향 주제 리스트

호수	일자	내 용	호수	일자	내 용
12호	7.29.	폭염,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기상 재해	66호	8.17.	의료인력 지역불균형 심각
13호	8.5.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취약계층	67호	8.24.	북한이탈주민 현황
14호	8.12.	아동학대	68호	8.31.	빈곤과 소득 양극화
15호	8.19.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69호	9.7.	청년의 경제 활동
16호	8.26.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70호	9.22.	2015 인구주택총조사 주요 통계
17호	9.2.	국민의료비	71호	9.29.	OECD 주요국 아동복지 수준
18호	9.9.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	72호	10.6.	우리나라 노인범죄 통계
19호	9.16.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충동 심각	73호	10.13.	통계로 보는 초저출산 위험 신호
20호	9.2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74호	10.20.	장애인의 소득보장 실태
21호	9.30.	노인의 여가활동	75호	10.27.	4차 산업혁명의 전망과 대응
22호	10.7.	장기요양기관 수 및 전문인력 현황	76호	11.3.	복지예산의 규모와 변화(2012-2016)
23호	10.14.	노인 진료비와 다발성 질병 순위	77호	11.10.	빅데이터로 본 한국의 비만
24호	10.21.	합계출산율과 평균 출산연령	78호	11.17.	진료비 증가 추이와 노인진료비 현황
25호	10.28.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	79호	11.24.	교통사고 위험국가 한국
26호	11.4.	노후 걱정에 일하는 노인들	80호	12.1.	한국의 자원봉사 현황
27호	11.11.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	81호	12.8.	우리나라 인권 통계
28호	11.18.	소득수준과 기대수명	82호	12.15.	연차휴가 얼마나 쓰셨나요? (직장인 연차휴가 사용 실태)
29호	11.25.	다문화 혼인이 줄고 있다	83호	12.22.	2015년 기부실태 통계
30호	12.02.	기부에 대한 국민 인식	84호	12.29.	2015 지역소득 통계
31호	12.09.	공공사회지출 추이	85호	1.5.	닭(酉)띠 인구통계
32호	12.16.	세대별 사회의식 비교	86호	1.12.	주요 노인복지제도별 수급자 규모 전망
33호	12.23.	경기도의 1인 가구	87호	1.19.	2016 하반기 경제행복지수
34호	12.30.	한국의 노동 현실	88호	1.26.	인구 노령화 추이(전국, 경기도)
35호	1.6.	경기도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89호	2.2.	한국인 노동시간 변화상
36호	1.13.	기초연금 수급 현황	90호	2.9.	경기도 화재발생 현황
37호	1.20.	아동학대 건 수 10년 새 약 2.6배 증가	91호	2.16.	2016 인구이동 현황
38호	1.27.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 현황	92호	2.23.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실태
39호	2.3.	등록장애인 현황	93호	3.2.	주요국별 조세부담률 비교
40호	2.17.	노인학대 현황	94호	3.9.	실종아동 발생 현황
41호	2.2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황	95호	3.16.	한국의 사망인구와 화장률 추이
42호	3.2.	2015년 경기도의 인구이동	96호	3.23.	한국 실업급여 현황
43호	3.9.	2015 가계동향,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0.6%	97호	3.30.	한국 빈곤가구의 계층이동
44호	3.16.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복지기술	98호	4.6.	상용직-임시일용직 근로시간 및 임금 통계
45호	3.23.	스스로를 포기하는 노인의 자기방임	99호	4.13.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
46호	3.30.	사회복지사의 규모 및 보수 현황	<b>해외동향</b>		
47호	4.6.	보건·의료로 막을 수 있는 '회피가능 사망률'	35호	1.6.	신년사를 통해 본 2016년 세계경제 키워드
48호	4.14.	20대 총선 여성 지역구 최다 당선 장애인 후보는 1명에 불과	38호	1.27.	영국의 아동학대 예방체계, 기관 간 연계가 핵심
49호	4.20.	장애인 취업 현황	42호	3.2.	2016년 미국 대선, 복지 정책의 향방은?
50호	4.27.	지방 재정 현황	47호	4.6.	해외 주거복지정책 : 주거안정화와 임대료 부담완화가 핵심
51호	5.4.	지방정부의 어린이 정책	51호	5.4.	전 세계의 어린이날, 어버이날
52호	5.11.	되돌아보는 주간복지동향의 1년	55호	6.1.	미국의 군인 예우,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보훈의식의 바탕
53호	5.18.	노인복지 실태(수급자 중 노인 비율, 노인고용률)	60호	7.6.	세계 여성의 날 제정 배경 및 현황
54호	5.25.	건강보험 통계	63호	7.27.	해외 근로복지제도
55호	6.1.	실업급여 통계	69호	9.7.	유럽의 청년 일자리 사업
56호	6.8.	청년 실업률	70호	9.22.	고령화에 따른 해외 연금 정책의 변화
57호	6.15.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와 연기금 운용 수익률	73호	10.13.	임산부를 위한 해외 정책 현황
58호	6.22.	기초연금 예산	77호	11.10.	트럼프 당선에 따른 미국 복지정책 변화 전망
59호	6.29.	국민기초생활제도 관련 추이	79호	11.24.	사고 희생자 유가족의 상실과 슬픔(Loss & Grief)의 치유
60호	7.6.	여성공무원 30만 시대, 공직사회의 유리천장	80호	12.1.	자원봉사와 삶의 만족도
61호	7.13.	기부 현황	88호	1.26.	해외 반부패(Anti-corruption) 정책 현황
62호	7.20.	사회복지시설 현황	92호	2.23.	공공부조 수급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기준
63호	7.27.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96호	3.23.	세계사회복지의 날(World Social Work Day)
64호	8.3.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돌파, 9년 만에 두 배	99호	4.13.	해외 장애인복지 현황
65호	8.10.	폭염의 다른 이름, '소리 없는 살인자'			